

‘한때’ 대기업... 롯데와 관련 없어도... 불매운동 대상 ‘억울’ 피해 떠안는 영세상인

Q 르포
韓日 경제전쟁 현장을 가다

동네마트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모노마트 내부는 한산했다. 점원들은 최고 37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팔을 걷어붙인 채 유리창 외벽만 닦고 있었다. 뒤편 유리창 너머로 일본어 안내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일본 식자재 유통업체 모노마트. /LF푸드

매장의 한산한 분위기가 최근 거세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실감케 했다. 모노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일본이 원산지라고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일본산 제품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수입 식품과 식자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수많은 일본산 식자재 관련 홍보 게시물이 불매운동 분위기와 겹치며 이질감있게 다가왔다.

기자가 매장에서 머문 20여분 동안 고객은 두 세명 남짓. 점원들은 계속해서 유리창 외벽을 닦거나 물건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판매제품 일부 원산지 ‘일본’ 소비자들 불매운동 표적으로 평균 구매액 10만원~3만원 ‘당장 간판 바뀌도 상관없다’

◆일본 식자재만 팔아도 불매?

해당 모노마트 점주는 불매운동 대상 목록에 오른 것에 대해 억울해했다. 실제로 모노마트는 일본계 지분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한국기업 LF의 100% 자회사 LF푸드가 2017년 인수했다. 그럼에도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이유는 과거 일본 식자재 유통회사 ‘모노링크’의 소유였던 탓에 아직 일본기업 딱지를 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점주는 “아직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없다”면서도 “모노마트가 불매운동 대상 기업 목록에 오른 것은 부적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체 품목 중 일본산은 30%~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산 제품과 다국적 제품이 섞여 있다”며 “앞으로 유럽과 동남아쪽 제품을 더 늘리고, 일본 제품의 비중은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마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일본 식자재 전문점 ‘에이프라이스’의 상황은 심각했다.

점주는 “주고객층이 이자카야, 라멘집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다보니, 불매운동 이후에 손님이 많이 줄었고, 매출도 뚝 떨어졌다”며 “한 번 구매할 때마다 평균 10만원 대였는데, 최근 불매운동 이후 3~4만원 대로 줄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억울한 하모니마트... “우리는 개인사업자”

같은 날 방문한 하모니마트 구의점의 점주는 마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신경부터 곤두세웠다. 그는 “내일이라도 간판을 바꿔도 상관없다. 롯데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굳은 표정과 강한 어조에서 불매운동 논란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모니마트는 롯데슈퍼로부터 주류와 가공품 등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대부분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하모니마트의 법인인 CS유통은 2011년 롯데쇼핑에 인수됐다.

점주의 설명은 알려진 사실과 달랐다. 그는 “다른 지점하고 얘기조차 해본 적 없다. 롯데쇼핑보다 다른 도매업체에서 납품 받는 부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나 농협에 발주를 넣어도 상관없다”며 롯데쇼핑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모니마트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점주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하모니마트 관계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운영돼 롯데의 영향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지점장들 역시 개인사업자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일 감정이 거세지며 일본계 마트라는 일부 소비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원선 기자, 송태화·김수지 수습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한 하모니마트. /송태화 수습기자

“첫 분양자만 유리... 시장왜곡·공급축소 우려”

Q 르포

강남 중개업소 가보니

매수·매도자 없이 문의만 이어져 중개업 관계자 “시장 얼어붙을 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사까지 끝나고 분양만 앞두고 있는 단지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너무 예측불가적이다. 소급 적용해서 가격을 내리면 일부 현금부자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이익도 아니고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밖에 안 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에는 관련 문의는 많았지만 매수·매도자 모두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나올 때까지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이 임박한 강동구 둔촌주공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다들 둔촌주공 일반분양이 풀릴 시기를 살펴보며 눈치를 보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일반분양 가격이 조합원 물량보다 크게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12일 밝힌 가운데 이 날 오후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5억원이나 저렴하다”며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집을 팔라고 하겠나. 단기나, 장기나 갈리는 상황인데 집주인들은 버틸 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자 역시 “분양가상한제는 어쨌든 처음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는 유리해 과연 강남 지역의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만 일반인들에게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매수세도 뚝 끊기고, 시장에서의 거래 자체가 많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주춤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

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는 가격 상승 폭이 줄어 충분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기준에 분양하려 했던 조합들은 대부분 분양시기 연기를 논의 중이라 공급은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과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업자 역시 “지금 당장은 정책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 후에는 공급부족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로또 청약에 따른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비롯해 기존 3~10년 이하의 아파트 등 전매제한을 안 받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길·김수지·송태화·이인영 수습기자 sayk6110@

롯데주류 “日 아사히와 무관... 혼동 마세요”

‘처음처럼’ 브랜드 히스토리 홍보 ‘허위사실 유포땀 강경대응 할 것’

롯데주류가 ‘처음처럼’ 브랜드 히스토리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본 아사히가 롯데주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롯데주류의 제품들이 일본 제품’이라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주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

본 아사히와 롯데주류의 지분 관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공지하는 한편, ‘처음처럼’의 브랜드 히스토리를 담은 유인물과 현수막을 제작해 주요 상권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06년 출시된 ‘처음처럼’은 1926년 ‘강릉합동주조’에서 생산하던 ‘경월’을 시작으로 1993년 ‘초록색 소주병’ 바람을 일으킨 ‘그린’, 2001년 강원도를 상징하는 ‘산’ 소주까지 약 90년의 정통성을 있는 브랜드라는 것이 롯데주류의 설명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처음처럼은 대한민국 소주 브랜드입니다. 2006년 탄생한 '처음처럼'은 1926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생산된 '경월' 소주에 유인물과 현수막을 제작해 주요 상권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처음처럼'은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입니다. '처음처럼'은 2006년 탄생한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입니다. '처음처럼'은 2006년 탄생한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입니다. '처음처럼'은 2006년 탄생한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입니다.

금융 지원하다 발생한 손실 ‘면책’

앞으로 혁신금융 산업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허가, 검사·제재 등 감독방식이 바뀐다.

110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동산담보대출 등 혁신금융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해는 면책을 받는다. 혁신금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감독방식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 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기준



손병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도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기존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지속하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 있어 개선

금융당국, 감독 혁신방안 마련

요건 간소화, 면책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와 같은 정책여건을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에 걸쳐 반영한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혁신적 사업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진입요건을 간소화한다.

인허가 등록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과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단순 사항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전결처리하는 방식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나유리 기자 yu115@